

예산낭비추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산낭비유형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Budget Waste Trends: Focused on Types of Budget Waste

이 정 주(Lee, Chung-joo)**

ABSTRACT

Up to now, status analysis about budget waste as a kind of corruption cannot be done properly than perception on seriousness of it. According to expectation that budget is costly consuming caused by many welfare policy of new government, there is condition that cannot help going back systematically the problem of budget waste existing.

Therefore, in this study, I classified types of budget waste by using press data of past 10 years(Roh Moo-hyun administration ~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lso, on the basis of these, I conducted trend analysis about public institutions(examp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etc) and corruption vulnerable areas(example: construction, corporate credit cards, travel expenses, contract etc) that budget waste ari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budget and integrity promotion by presenting policy directionality for budget waste erad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Key words : Budget waste trends, Types of budget waste, Corruption

1. 서론

일반적으로 부패(corruption)는 어원적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의미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개인, 사회, 국가에 있어 암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부패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지역사회 통합저해, 각종 정책에 대한 행정 불신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척결, 즉 청렴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이정주, 2011).

이러한 청렴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직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금횡령/예산유용과 같은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11월에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400명을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능화된 부패인가? 반복적인 부패인가?: 예산낭비유형을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소/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대상으로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을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15.1%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4.6%)’, ‘금품수수(17.6%)’에 이어 세 번째로 ‘공금횡령/예산유용’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예산낭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예산낭비와 관련된 법제도적 차원에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이나 공직자 행동강령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부패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과거의 역대 정부에서와 같이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의 예산 낭비도 일종의 부패 차원을 넘어서 범죄라고 언급할 정도로 예산낭비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예산 낭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최근 많은 복지 정책에 따라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낭비의 문제를 되짚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낭비가 잘못된 문제라는 일반적 인식에 비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는 예산낭비와 관련된 부분이 행정실무적인 성격이 짙어 이론적 연구를 중시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산낭비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시간적 변화에 따라 예산낭비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통해 과거와 달리 예산낭비가 지능화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 답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예산낭비 패턴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있어야 함에도 기존의 학문적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예산낭비 실태분석을 위해 신문자료 검색을 통해 지난 정권 중 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가장 높았던 노무현 정부와 집권기관 동안 계속해서 청렴도 지수가 하락 또는 정체 했던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예산낭비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기관(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과 분야(예: 건설·공사·청사건립, 법인카드·출장비 사용, 계약 등)를 접목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최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복지예산 등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확보의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예산낭비의 이론적 배경

1. 예산낭비의 개념 및 평가기준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함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직이 성취하려는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예산낭비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예산낭비는 예산운영에 있어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박민정, 2011). 이러한 연구경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예산낭비는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의도 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았거나 재정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말미암아 국민의 부담을 유발시키는 행위나 제도(한국정책학회, 2006), 또는 시민 감시적인 측면에서 상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효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결국 예산낭비는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남·오용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예산낭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3E인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이 사용된다(윤영진, 1999).

경제성은 인원, 장비와 같은 자원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시장가격보다 과다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를 의미한다. 효율성은 투입(사용된 자원)과 산출(생산된 서비스)간의 비율로 자원투입에 대해 달성된 산출을 의미하며, 자원 투입에 대해 달성된 산출(효과)이 현저히 적은 경우와 주어진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과도한 자원 투입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효과성은 정책목표의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며, 산출(결과)과 목표 간의 관계로서 정의되며 예산 집행을 통해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결국 예산낭비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기준을 초과한 특정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1) 이원희(2009)는 예산의 명백성의 기준과 시계의 기준에 따라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최협의의 예산낭비는 불법성에 근거한 예산낭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저지르는 경우로, 협의의 예산낭비는 불법성에 근거는 하지 않지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로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조직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예산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의개념은 협의의 예산낭비와 지식의 한계에 따라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해당 정책 혹은 사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편익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의 예산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최광의 개념은 광의의 예산과 효율성 이외에 형평성이라는 가치의 충돌로 인한 예산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예산낭비와 부패와의 관련성

부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같이 개인의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이외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예산 낭비적 요소도 부패라는 개념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²⁾의 주요 내용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부당이득수수를 막기 위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가 규정됨으로써 예산 낭비적 요소를 부패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예산낭비는 전통적으로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뇌물수수, 배임·횡령과 같이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예산낭비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및 비판적 검토

예산낭비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의회에서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을 먼저 점검하자는 논의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출의 낭비적 요인이 있음을 밝히게 됨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이원희, 2009). 그 이후 미국에서는 예산 낭비를 FWA(횡령, 낭비, 남용: Fraud, Waste, Abuse)의 관점에서 예산낭비를 논의하고 있다.³⁾

예산낭비의 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분류는 W. Stanbury & F. Thomson(1995)의 연구결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원희, 2009).

첫째, 5명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형(기계적 비효율성), 둘째, 국민경제에 맞는 적절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보다는 과잉 또는 과소 공급하는 유형(A 유형의 배분적 비효율성), 셋째, 전혀 수요가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유형(B 유형의 배분적 비효율성), 넷째, 과급비용의 발생이나 특이하게 정부의 정책실시에 수반하여 시민에게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3) FWA에는 공공의 신뢰침해, 공적인 편익을 사적인 목적으로 전환, 권위의 왜곡, 법이나 규칙의 부당한 집행,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공공자원을 잘못 적용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불필요하게 유발되는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유형, 다섯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형(유휴자산의 존재), 여섯째, 부패, 횡령, 번잡한 절차를 통한 낭비(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일곱째, 정책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밑 빠진 독에 의한 낭비), 여덟째, 시장보다 비싼 인건비나 단가를 과다지급 하는 것과 같은 낭비적 이전 지출에 의한 낭비, 아홉째는 독점권이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벌리는 각종 로비에서 발생하는 낭비와 같이 지대추구로 인한 낭비유형이다.

김선구(1999)는 일반시민들이 목격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유형으로 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심성 행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② 입찰과 구매과정 등의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③ 미리 수립되어 배정된 예산을 소모하지 않을 경우 차기 년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 ④ 공직자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의 결여로 인한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⑤ 공직자가 현장확인, 전문자 자문, 시장조사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절감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인력부족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직무유기를 함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로 구분해서 분류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인수위원회(2008)는 현장감 있게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온 주요 예산낭비 사례들을 관련 사업분야 또는 예산편성·집행 단계 등을 기준으로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분류하였다. 예산낭비 10대 유형으로는 ①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② 중복 또는 과잉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③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④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⑤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⑥ 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⑦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⑧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⑨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상실 ⑩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류는 W. Stanbury & F. Thomson(1995)의 이론적 유형분류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실제 예산낭비사례를 토대로 구체화시킨 것으로 현실적인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앞선 기존 예산낭비 유형에 대한 분류를 종합해 보면⁴⁾ 예산낭비의 판단근거는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예산낭비의 시각으로 공직자 개인, 제도적 결함, 정책결정체제로 구분하여 각각 예산낭비유형을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4) 학술검색사이트인 <http://kiss.kstudy.com>와 <http://www.dbpia.co.kr/>로 예산낭비를 검색어로 하여 입력한 결과 본 연구과 관련성이 있는 논문은 각각 5건, 1건밖에 검색되지 않아 국내적으로 예산낭비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예산낭비의 판단근거, 접근시각에 따른 예산낭비 유형

| 예산낭비의 판단근거 | 예산낭비 접근시각 | 예산낭비유형 |
|-------------------|-----------|--------------------------------------------------------------------------------------------------------------------------------------------------------------------------------------|
|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 공직자 개인 | ▶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등 |
| | 제도적 결함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 | 정책결정체계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선심성·과시성 행사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독점권이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 |

한편 기존 예산낭비유형의 연구경향은 주로 유형분류나 유형분류에 따른 주요사례 소개에 그쳐 한국사회에 어떠한 예산낭비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예산낭비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의 예산낭비유형 분류방식은 주로 예산낭비의 실질적인 내용(focus)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 또는 분야(locus)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산낭비유형 분류체계를 활용하되 부패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예산낭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이 어디이며, 어떠한 분야(예: 건설·공사·청사건립, 법인카드·출장비 사용, 계약 등)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병행해서 살펴본다.

이는 예산낭비의 유형 변화뿐만 아니라, 예산낭비행태가 특정분야 또는 특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I. 예산낭비의 실태분석

예산낭비의 실태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예산낭비를 손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신문기사는 신문검색사이트인 카인즈(<http://www.kinds.or.kr/>)에서 ‘예산낭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당 자료를 수집하였다.⁵⁾ 기사 내용상으로 예산낭비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와 이에 대해 반박하는 주체가 있어 예산낭비 의혹이나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기사는 제외하고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결과 등 예산낭비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사자료를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동일사안의 중복된 기사는 하나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예산낭비유형으로 해당될 경우 신문기사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을 해당 예산낭비유형으로 보아 분류하였다.

분석대상의 시기는 방위사업청 개청,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과 같은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국가청렴도 지수가 가장 높았던 노무현 정부(2003-2008)와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와 타 기관(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과의 통제, 삼성회장에 대한 사면, 검사 스폰스 사건, 사회지도층의 추문 등으로 국가청렴도 지수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2008-2013)를 포함한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1. 지난 10년간(2003-2013)의 예산낭비 실태

1) 예산낭비의 주요 형태

조사된 예산낭비사례는 총231건으로, 예산낭비의 주요 형태로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이 50건(2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48건, 20.8%)’과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48건, 20.8%)’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31건: 13.4%)’,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20건: 8.7%)’, ‘선심성, 과시성 행사(16건: 6.9%)’, ‘불합리한 제도 및 제도적 장치 미비(10건, 4.3%)’,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관리 잘못(4건: 1.7%)’,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4건: 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공직자 개인에 의한 예산낭비’와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보다 ‘정책결정체계상의 예산낭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결정체계를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중복적

5)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로 일반국민은 주로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 자료에 기초하여’(50.3%)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또는 과잉투자'와 같은 예산집행 및 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획단계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예산낭비의 주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예산낭비 접근시각에 의한 지난 10년간(2003-2013) 예산낭비 유형

| 예산낭비 접근시각 | 예산낭비 유형 | 빈도 | 퍼센트 |
|-----------|-------------------------|-----|------|
| 공직자 개인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 20 | 8.7 |
| 정책결정체계 |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잘못 | 48 | 20.8 |
| |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48 | 20.8 |
| |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 31 | 13.4 |
| |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50 | 21.6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관리 잘못 | 4 | 1.7 |
| | 선심성, 과시성 행사 | 16 | 6.9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관리 | 4 | 1.7 |
| 제도적 결함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장치의 미비 | 10 | 4.3 |
| 합계 | | 231 | 100 |

2) 기관별 예산낭비 실태

기관별로 총 231건 중, 지방자치단체 101건(43.7%), 중앙행정기관 74건(32.0%), 공직유관단체 48건(20.8%), 교육청 8건(3.5%)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낭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관별 지난 10년간(2003-2013) 예산낭비 실태

| | 빈도 | 퍼센트 |
|--------|-----|-------|
| 중앙행정기관 | 74 | 32.0 |
| 지방자치단체 | 101 | 43.7 |
| 공직유관단체 | 48 | 20.8 |
| 교육청 | 8 | 3.5 |
| 합계 | 231 | 100.0 |

3) 분야별 예산낭비 실태

분야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부패취약분야라 할 수 있는 '건설/공사/청사건립과정(35.9%)'에서 가장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계약분야(9.1%)', '법인카드나 출장비와 공금사용 분야(6.9%)', '교육/워크숍 연수 분야(6.5%)',

‘관광·축제·국제행사(6.5%)’로 나타났다.

<표 4> 분야별 지난 10년간(2003-2011) 주요 예산낭비 실태

| 분야 | 빈도 | 퍼센트 |
|------------------|-----|-------|
| 건설/공사/청사건립 | 83 | 35.9 |
| 공금(출장비) 및 법인카드 | 16 | 6.9 |
| 관광/축제/국제행사 | 15 | 6.5 |
| 교육/워크숍(연수) | 15 | 6.5 |
| 계약 | 21 | 9.1 |
| 기타 ¹⁾ | 81 | 35.1 |
| 합계 | 231 | 100.0 |

1) 기타(기념품 및 홍보 블로그, 의료, 지역개발 등)는 총 조사대상건수의 5% 이하의 분야를 총계해서 집계하였으며, 각 항목별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연구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다음으로는 앞서 제시된 지난 10년간의 예산낭비실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정권별로 나누어서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예산 낭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예산낭비의 패턴을 살펴 보도록 한다.

2. 노무현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

1) 예산낭비의 주요 형태

노무현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로 조사된 총 건수는 85건으로,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17건, 20.0%)’와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17건, 20.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16건, 18.8%)’,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15건, 17.6%)’,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12건, 14.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결정체계상에서 중복적 과잉투자의 주요 사례 중 노무현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지역 정보화 사업이나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부처 간/지역 간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 정권의 주요 역점사업이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의 전형적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노무현 정부(2003-2008)의 예산낭비 주요 행태

| 예산낭비 접근시각 | 예산낭비 유형 | 빈도 | 퍼센트 |
|-----------|-------------------------|----|-------|
| 공직자 개인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 12 | 14.1 |
| 정책결정체계 |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잘못 | 15 | 17.6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 16 | 18.8 |
| |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 17 | 20.0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17 | 20.0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관리 잘못 | 2 | 2.4 |
| | 선심성, 과시성 행사 | 2 | 2.4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관리 | 1 | 1.2 |
| 제도적 결함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장치의 미비 | 3 | 3.5 |
| 합계 | | 85 | 100.0 |

2) 기관별 예산낭비 실태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 35건(41.2%), 지방자치단체 29건(34.1%), 공직유관단체 18건(21.2%), 교육청 3건(3.5%)으로 나타났으며, 집권 중반기인 2005년에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로 인해 디스카운트 된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사회전반적인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부문 간의 적극적인 협력(governance)을 통한 반부패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투명사회협약이 2005년도 3월 9일에 체결되고, 예산낭비 근절과 같은 반부패·청렴의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언론 상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노무현 정부(2003-2008)의 기관별 예산낭비 실태

(단위: 건수, %)

| 조사대상 연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교육청 | 합계 |
|------------|----------|----------|----------|--------|----------|
| 2003 | 7 | 5 | - | - | 12 |
| 2004 | 9 | 2 | 2 | - | 13 |
| 2005 | 8 | 10 | 7 | 3 | 28 |
| 2006 | 4 | 4 | 6 | - | 14 |
| 2007 | 6 | 8 | 2 | - | 16 |
| 2008 | 1 | - | 1 | - | 2 |
| 합계 | 35(41.2) | 29(34.1) | 18(21.2) | 3(3.5) | 85(100%) |

가. 중앙행정기관

노무현 정부당시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적 측면이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예산낭비 유형보다 정책결정체계에서 예산낭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결정체계 중 ‘기관간의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9건, 25.7%)’에 의한 예산낭비가 집권 말기인 2008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타 예산낭비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주요 예산낭비유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기관간의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8건, 22.9%)’와 같은 집행단계에서의 예산낭비유형과 못지않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8건, 22.9%)’과 같은 기획단계에서의 예산낭비유형도 많이 나타나 기획단계 시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 등과 같은 관점에서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예산낭비사례의 패턴은 집권 상반기에 많이 나타나다가 중반기를 거쳐 하반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무현 정부(2003-2008)의 중앙행정기관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합계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2 | 1 | - | - | - | - | 3(8.6%)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2 | 2 | 2 | - | 1 | 1 | 8(22.9%)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1 | 3 | 2 | - | - | - | 6(17.1%)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1 | 1 | 4 | 1 | 2 | - | 9(25.7%)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1 | 1 | - | 2 | 3 | - | 7(20.0%)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 | 1 | - | - | - | - | 1(2.9%)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1 | - | - | - | - | - | 1(2.9%) |
| 합계 | 8 | 9 | 8 | 3 | 6 | 1 | 35(100%) |

나. 지방자치단체

노무현 정부당시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측면의 예산낭비사례(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7건, 24.1%)가 정책결정체계에서

각 예산낭비유형사례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결정체계에서는 앞선 중앙행정기관의 예산낭비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6건, 20.7%)’, 그리고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4건, 13.8%)’,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4건, 13.8%)’,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사용(4건, 13.8%)’이 여전히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예산낭비사례는 집권 초반기나 하반기에 비해 집권 중반기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8> 노무현 정부(2003-2008)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합계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1 | - | 4 | 1 | 1 | - | 7(24.1)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1 | - | 2 | 1 | 2 | - | 6(20.7)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2 | - | - | - | 2 | - | 4(13.8)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 | 1 | - | 1 | 2 | - | 4(13.8)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 | 1 | 1 | 1 | 1 | - | 4(13.8)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1 | - | 1 | - | - | - | 2(6.9)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 | - | - | - | - | - | 0(0)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 | - | 1 | - | - | - | 1(3.4)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 | - | 1 | - | - | - | 1(3.4) |
| 합계 | 5 | 2 | 10 | 4 | 8 | 0 | 29(100) |

다.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같은 기획 단계보다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6건, 33.3%)’,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5건, 27.8%)’가 주로 많이 나타나 예산의 집행과정상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기별로 노무현 집권 중반기라 볼 수 있는 2005년과 2006년에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노무현 정부(2003-2008)의 공직유관단체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합계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 | - | - | - | 1 | - | 1(5.6)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 | 1 | - | - | - | - | 1(5.6)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 | - | 3 | 2 | - | - | 5(27.8)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 | 1 | 1 | 2 | 1 | 1 | 6(33.3)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 | - | - | - | - | - | 0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 | - | 2 | 2 | - | - | 4(22.2)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 | - | 1 | - | - | - | 1(5.6) |
| 합계 | 0 | 2 | 7 | 6 | 2 | 1 | 18 |

라. 교육청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는 교육 비리의 심각성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다수의 교육청과 관련된 부패나 비리는 기관의 예산낭비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학부모로부터 촌지수수와 같은 사례가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점을 감안해 파악한 교육청의 예산낭비유형으로는 개인적 측면의 예산낭비인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1건, 33.3%)’ 그리고 정책결정체제 중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1건, 33.3%)’, ‘선심성·과시성 행사(1건, 33.3%)’로 나타났다.

<표 10> 노무현 정부(2003-2008)의 교육청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합계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 | - | 1 | - | - | - | 1(33.3%)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 | - | 1 | - | - | - | 1(33.3%)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 | - | 1 | - | - | - | 1(33.3%) |
| 합계 | 0 | 0 | 3 | 0 | 0 | 0 | 3 |

3) 분야별 예산낭비 실태

분야별로 기타를 제외하고 ‘건설/공사/청사건립과정(28건, 32.9%)’에서 가장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공금(출장비) 및 법인카드(14건, 16.5%)’, ‘계약분야(10건, 11.8%)’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무현 정부(2003-2008)의 분야별 예산낭비 실태

| 분야 | 빈도 | 퍼센트 |
|----------------|----|-------|
| 건설/공사/청사건립 | 28 | 32.9 |
| 공금(출장비) 및 법인카드 | 14 | 16.5 |
| 관광/축제/국제행사 | 4 | 4.7 |
| 교육/워크숍(연수) | 4 | 4.7 |
| 계약 | 10 | 11.8 |
| 고용/노동 | 3 | 3.5 |
| 장비관리(구입/교체/분실) | 3 | 3.5 |
| 기타1) | 22 | 22.4 |
| 합계 | 85 | 100.0 |

1) 기타(기념품 및 홍보 블로그, 의료, 지역개발 등)는 항목별 차지하는 건수가 1건 등으로 비율이 낮아 연구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4) 소결론

앞선 논의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 언론 상에서 보도되었던 예산낭비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중복적 투자 또는 과잉투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과 같은 정책결정체계상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사례가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와 같은 공직자 개인의 예산낭비사례 보다 많이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타 기관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기관의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못지않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 예산낭비의 주요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정책결정체계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예산낭비보다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과 같은 공직자 개인관점의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직유관단체 및 교육청의 경우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로는 건설/공사/청사건립분야, 공금(출장비) 및 법인카드와 같은 공금분야에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 실태

1) 예산낭비의 주요 형태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로 조사된 총 건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85건보다 1.7배 정도 많은 146건으로 나타났다. 예산낭비의 주요 형태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잘못(33건, 22.6%)’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33건, 2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32건, 21.9%)’,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14건, 9.6%)’, ‘선심성, 과시성 행사(14건, 9.6%)’ 등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명박 정부(2008-2013)의 예산낭비 주요 형태

| 예산낭비 접근시각 | 예산낭비 유형 | 빈도 | 퍼센트 |
|-----------|-------------------------|-----|-------|
| 공직자 개인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 8 | 5.5 |
| 정책결정체계 |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잘못 | 33 | 22.6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 32 | 21.9 |
| |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 14 | 9.6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33 | 22.6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관리 잘못 | 2 | 1.4 |
| | 선심성, 과시성 행사 | 14 | 9.6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관리 | 3 | 2.1 |
| 제도적 결함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장치의 미비 | 7 | 4.8 |
| 합계 | | 146 | 100.0 |

한편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틀어 예산낭비유형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한 결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40.2%)’,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40.7%)’,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42.6%)’이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한 예산낭비 유형임을 알 수 있다(<표 13>참고).

또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유형의 추이를 보았을 때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는 10.4%,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의 예산 낭비는 8.6% 정도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선심성, 과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7.2%,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5.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적인 흐름상 예산낭비가 단순한 개인 차원이나 예산집행상의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선심성 위주의 정책으로 예산낭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언론 보도 상으로 예산낭비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국책사업의 경우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유형 추이

| 예산낭비 접근시각 | 예산낭비 유형 | 노무현 정부 (A): 단위% | 이명박 정부 (B): 단위% | (B)-(A) |
|-----------|-------------------------|-----------------|-----------------|---------|
| 공직자 개인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 14.1 | 5.5 | -8.6 |
| 정책결정체계 |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잘못 | 17.6 | 22.6 | 5.0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 18.8 | 21.9 | 3.1 |
| |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 20.0 | 9.6 | -10.4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20.0 | 22.6 | 2.6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관리 잘못 | 2.4 | 1.4 | -1 |
| | 선심성, 과시성 행사 | 2.4 | 9.6 | 7.2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관리 | 1.2 | 2.1 | 0.9 |
| 제도적 결함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장치의 미비 | 3.5 | 4.8 | 1.3 |
| 합계 | | 100.0 | 100.0 | |

2) 기관별 예산낭비 실태

기관별 예산낭비 실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72건(49.3%), 중앙행정기관 39건(26.7%), 공직유관단체 30건(20.5%), 교육청 5건(3.4%)으로 나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해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이명박 정부(2008-2013)의 기관별 예산낭비실태

(단위: 건수, %)

| 연도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교육청 | 합계 |
|-----------|-----------|-----------|-----------|---------|-----------|
| 2008 | 6 | 10 | 7 | - | 23 |
| 2009 | 6 | 6 | 4 | 2 | 18 |
| 2010 | 3 | 8 | 4 | 1 | 16 |
| 2011 | 14 | 30 | 6 | - | 50 |
| 2012 | 10 | 18 | 9 | 2 | 39 |
| 2013 | - | - | - | - | - |
| 합계 | 39(26.7%) | 72(49.3%) | 30(20.5%) | 5(3.4%) | 146(100%) |

또한 예산낭비 비율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낭비사례의 경우 14.5%정도 감소한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사례가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주요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기관별 예산낭비 추이

(단위: %)

| 연도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교육청 |
|-----------|--------|--------|--------|------|
| 노무현 정부(a) | 41.2 | 34.1 | 21.2 | 3.5 |
| 이명박 정부(b) | 26.7 | 49.3 | 20.5 | 3.4 |
| 차이(b-a) | -14.5 | 15.2 | -0.7 | -0.1 |

가. 중앙행정기관

이명박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정책결정체계에서 예산낭비가 개인적 측면의 예산낭비유형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결정체계 중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11건, 28.2%)'과 같은 기획단계에서의 예산낭비유형이 과거 예산낭비의 전형적 형태로 분류되던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9건, 23.1%)'이나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5건, 12.8%)'과 같은 집행단계에서의 예산 낭비유형만큼이나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낭비사례가 집권 초창기에 비해 집권 말기로 갈수록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이명박 정부(2008-2013)의 중앙행정기관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계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 | 1 | - | - | - | - | 1(2.6)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2 | 2 | 1 | 3 | 3 | - | 11(28.2)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2 | 1 | | 3 | 3 | - | 9(23.1)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 | 1 | 1 | 2 | 2 | - | 6(15.4)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1 | - | - | 4 | - | - | 5(12.8)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 | - | - | - | - | - | 0(0)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 | - | - | 2 | 1 | - | 3(7.7)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1 | - | 1 | - | - | - | 2(5.1)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 | 1 | - | - | 1 | - | 2(5.1) |
| 합계 | 6 | 6 | 3 | 14 | 10 | - | 39(100)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낭비 유형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6.0%)’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5.3%)’,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5.1%)’, ‘선심성·과시성 행사(+4.8%)’ 등이 소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 때 예산낭비 유형 중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크게 감소(-10.3%)했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7.2%),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6.0%)’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예산낭비유형 추이

(단위: %)

| 예산낭비 유형 | 노무현 정부(A) | 이명박 정부(B) | B-A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8.6 | 2.6 | -6.0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22.9 | 28.2 | 5.3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17.1 | 23.1 | 6.0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25.7 | 15.4 | -10.3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20.0 | 12.8 | -7.2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 | 0 | 0.0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2.9 | 7.7 | 4.8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 | 5.1 | 5.1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2.9 | 5.1 | 2.2 |

나.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도 전반적으로 정책결정체계에서의 예산낭비가 개인적 측면의 예산낭비사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결정체계에서는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20건, 27.8%)’,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15건, 20.8%)’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 기획에서 집행까지의 정책전반적인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12건, 16.7%)’, ‘선심성·과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10건, 13.9%)’가 여전히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예산낭비사례는 2013년을 제외하고 집권말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이명박 정부(2008-2013)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계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1 | 1 | - | - | 3 | - | 5(6.9)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3 | - | 3 | 9 | - | - | 15(20.8)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1 | - | 1 | 3 | 7 | - | 12(16.7)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2 | 2 | 1 | 3 | - | - | 8(11.1)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1 | 2 | 3 | 9 | 5 | - | 20(27.8)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 | - | - | - | - | - | 0(0)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2 | 1 | - | 5 | 2 | - | 10(13.9)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 | - | - | - | - | - | 0(0)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 | - | - | 1 | 1 | - | 2(2.8) |
| 합계 | 10 | | 8 | 30 | 18 | 0 | 66(100)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유형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14.0%)’과 ‘선심성·과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13.9%)’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2.9%)’가 이전 정부에 비해 소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의 경우가 많이 나타난 것은 국외연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나친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청사 건립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축제 및 행사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 때 예산낭비 유형 중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 공직자 개인의 측면인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크게 감소(-17.2%)했으며, 그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 잘못(-6.9%)’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개인적인 측면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줄어든 것은 과거와 달리 각종 반부패청렴 정책(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인해 부패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부담감 또는 기대 이익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공직자 개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표 19>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유형 추이

(단위: %)

| 예산낭비 유형 | 노무현 정부(A) | 이명박 정부(B) | B-A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24.1 | 6.9 | -17.2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20.7 | 20.8 | 0.1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13.8 | 16.7 | 2.9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13.8 | 11.1 | -2.7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13.8 | 27.8 | 14.0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6.9 | 0.0 | -6.9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0.0 | 13.9 | 13.9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3.4 | 0.0 | -3.4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3.4 | 2.8 | -0.6 |

다.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예산낭비 유형으로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10건, 47.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5건, 23.8%)’,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5건, 23.8%)’,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4건, 19.0%)’ 등으로 나타났다.

<표 20> 이명박 정부(2008-2013)의 공직유관단체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8 | 2009 | 2010 | 2011 | 2112 | 2013 | 합계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1 | - | 2 | 2 | - | - | 5(23.8)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1 | 1 | - | - | 2 | - | 4(19.0)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2 | - | 2 | 1 | 5 | - | 10(47.6)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 | - | - | - | - | - | 0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 | 2 | - | 1 | 2 | - | 5(23.8)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2 | - | - | - | - | - | 2(9.5)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 | - | - | 1 | - | - | 1(4.8) |

| | | | | | | | |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1 | - | - | - | - | - | 1(4.8) |
| · 독점권이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 | - | - | - | - | - | - | 0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 1 | | 1 | - | - | 2(9.5) |
| 합계 | 7 | 4 | 4 | 6 | 9 | 0 | 21 |

하지만 공직유관단체 예산낭비유형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22.2%)’로 인한 예산낭비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9.5%)’로 인한 예산낭비유형이 가장 많이 줄어든 반면,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19.8%)’와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18.2%)’,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13.4%)’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직유관단체 예산낭비유형 추이

(단위: %)

| 예산낭비 유형 | 노무현 정부(A) | 이명박 정부(B) | B-A |
|---------------------------------|-----------|-----------|-------|
| ·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 공금횡령 | 5.6 | 23.8 | 18.2 |
|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 5.6 | 19.0 | 13.4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27.8 | 47.6 | 19.8 |
| · 중복적 또는 과잉 투자 | 22.2 | 0.0 | -22.2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33.3 | 23.8 | -9.5 |
| ·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 관리잘못 | 0 | 9.5 | 9.5 |
| · 선심성·과시성 행사 | 0 | 4.8 | 4.8 |
|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 0 | 4.8 | 4.8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5.6 | 9.5 | 3.9 |

라. 교육청

교육청에서의 예산낭비의 주요 유형으로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나타나는 예산낭비의 유형으로 드러났다.⁶⁾

6) 교육청 예산낭비로 조사된 사례수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우 각각 3건과 5건 밖에 되지 않아 추세분석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였다.

<표 22> 이명박 정부(2008-2011. 10)의 교육청 예산낭비유형

(단위: 건수, %)

| 예산낭비 유형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합계 |
|--------------------------|------|------|------|------|------|------|---------|
| ·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 | - | - | - | 1 | - | 1(20.0) |
| · 예산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 | 1 | 1 | - | 1 | - | 3(60.0) |
| · 불합리한 제도, 제도적 장치의 미비 | - | 1 | - | - | - | - | 1(20.0) |
| 합계 | 0 | 2 | 1 | 0 | 2 | 0 | 5 |

마. 예산낭비유형의 패턴 분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교육청을 포함한 정권별 예산낭비 유형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개인의 비리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책결정체계과정상이나 제도적 결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상 행정주체는 다르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등과 같은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10.4%)' 행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심성, 과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7.2%)',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5.0%)'가 타 예산낭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유형의 예산낭비(-10.3%)'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6.0%)'로 인한 예산낭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17.2%)'가 줄어드는 반면 '선심성 과시성 행사(+13.9%)'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로는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유형의 예산낭비(-22.2%)'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19.8%)'로 인한 예산낭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예산낭비유형으로는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예산낭비유형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선심성, 과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과거와 달리 정책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지능화된 부패의 일종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테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한국투명성기구, 2012), 이러

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적자 발생 시 국민이나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단계 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관점에서 세밀히 분석하여 사업 수행 유무를 판단해야 함에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식적인 절차행위에 그쳐 사업 종료 후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예산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 분야별 예산낭비 실태

분야별로 기타를 제외하고 ‘건설/공사/청사건립과정(55건, 37.7%)’에서 가장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축제/국제행사(11건, 7.5%)’, ‘교육/워크숍(11건, 7.5%)’, ‘계약(11건, 7.5%)’ 등으로 나타났다.

<표 23> 이명박 정부(2008-2013)의 분야별 예산낭비 실태

| 분야 | 빈도 | 퍼센트 |
|----------------|-----|-------|
| 건설/공사/청사건립 | 55 | 37.7 |
| 공금(출장비) 및 법인카드 | 2 | 1.4 |
| 관광/축제/국제행사 | 11 | 7.5 |
| 교육/워크숍(연수) | 11 | 7.5 |
| 계약 | 11 | 7.5 |
| 고용/노동 | 8 | 5.5 |
| 장비관리(구입/교체/분실) | 5 | 3.4 |
| 기타1) | 43 | 29.5 |
| 합계 | 146 | 100.0 |

1) 기타(기념품 및 홍보 블로그, 의료, 지역개발 등)는 항목별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연구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분야별 예산낭비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장 부패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설/공사/청사 건립’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하는 경향(+4.8%)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토목공사나 각종 청사건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산낭비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축제/국제행사로 인한 생색내기 식의 예산낭비(+2.8%)’라든지 ‘교육/워크숍 형태로 외유성 관광을 행하는 행위(+2.8%)’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법인카드나 출장비와 같은 공금에 대한 부당한 사용(-15.1%)’이 분석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린 카드제 실시,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인 성과와 이를 통한 공직자의

청렴인식 강화의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함으로써 계약분야의 부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으로 고용/노동 분야(+2.0%)에서의 예산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낭비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패라는 속성이 사업에 소요되는 공공프로젝트의 수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경향(Vito Tanzi and Hamid Davoodi, 1997)과 일치되는 측면이다.

<표 24>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분야별 예산낭비 추이

(단위: %)

| 분야 | 노무현 정부(A) | 이명박 정부(B) | B-A |
|----------------|-----------|-----------|-------|
| 건설/공사/청사건립 | 32.9 | 37.7 | 4.8 |
| 공금(출장비) 및 법인카드 | 16.5 | 1.4 | -15.1 |
| 관광/축제/국제행사 | 4.7 | 7.5 | 2.8 |
| 교육/워크숍(연수) | 4.7 | 7.5 | 2.8 |
| 계약 | 11.8 | 7.5 | -4.3 |
| 고용/노동 | 3.5 | 5.5 | 2.0 |
| 장비관리(구입/교체/분실) | 3.5 | 3.4 | -0.1 |

IV. 결론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정윤리를 저해하는 것이며, 이는 부패행위와 직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패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산낭비의 개념, 기준, 유형에 대한 일부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과 분야에서의 예산낭비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예산낭비와 관련된 부패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유형이 반복되는지를 알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하여 지난 10년(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간의 신문에서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두 정권간의 예산낭비유형을 적용해 본 결과, 특정시기의 정책적 변화나 사건에 의해 다소간 유형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부패가 지능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슷한 유형이 답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 개인적 측면의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가 차츰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책결정체계과정상'이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결정체계상 '선심성, 과시성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타 예산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다른 예산낭비유형과 달리 교묘한 정책포획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능화된 부패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유형의 예산낭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덕적 해이, 무능력, 직무유기, 유착비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반면 '선심성·과시성 행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유사하게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 유형의 예산낭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예산낭비유형은 '중복적 또는 과잉투자'로 나타난 반면,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예산낭비 유형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못',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 '선심성, 과시성 행사'로 나타났다.

다섯째, 분야별 예산낭비유형 추이를 보면 '건설/공사/청사건립분야'는 전통적인 부패영역으로 여전히 많은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축제/국제행사로 인한 생색내기 식의 예산낭비'라든지 '교육/워크숍 행태의 외유성 관광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법인카드나 출장비와 같은 공금에 대한 부당한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신문자료의 검색방식에 따라 분석될 수 있는 사례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한계이다. 둘째, 검색 시 해당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의 예산낭비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예산낭비사례는 신문이 아닌 다른 감사원 감사연보, 국민들의 예산낭비 신고사례 등 여러 가지의 방안으로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신문방식에 의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패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예산낭비에 대해 지난 두 정권 간의 추이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는 예산낭비유형과 과거보다 증

가하고 있는 예산낭비유형을 기관별 또는 분야별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방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1). 2010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분석.
- 김선구. (1999). 예·결산 심의방법과 예산낭비의 유형 및 사례: 예산낭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도시와 빈곤」: 25-31. 한국도시연구소.
- 박민정. (2011). 국책사업의 예산낭비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지방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55-84.
- 윤영진. (199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 세기의 과제 : 제 1 부 삶의 질과 정부 ; 시민단체와 예산낭비의 감시. 제 10 차 한 중 일 국제 학술대회(1999.10.15): 2-28.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이원희. (2009). 예산낭비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부패학회보」. 14(3): 99-119. 한국부패학회.
- 이정주. (2011). 청렴이 명품도시의 근간이다. 「월간 자치발전」. 3월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2-28.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지침」.
- 한국정책학회. (2006). 「예산낭비 대응 체제 개선방안」.
- 한국투명성기구. (2012). 「2020 청렴국가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Stanbury, W. and F. Thomson. (1995).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Government Waste: First Step, Defini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5(5): 418-427.
- Tanzi, V. and Hamid Davoodi. (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No. 97/139*. 1-23.

투고일자 : 2013. 02. 14

수정일자 : 2013. 03. 18

게재일자 : 2013. 03. 25

국문초록

예산낭비추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산낭비유형을 중심으로

이정주(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경희대 겸임교수)

현재까지 부패의 한 형태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비해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많은 복지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예산낭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되짚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예산낭비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기관(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과 분야(예: 건설·공사·청사건립, 법인카드·출장비 사용, 계약 등)를 접목해서 예산낭비의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예산낭비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청렴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예산낭비추이, 예산낭비유형, 부패